

02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안)
2012년 정부R&D예산,
2011년 대비 7.3% 증액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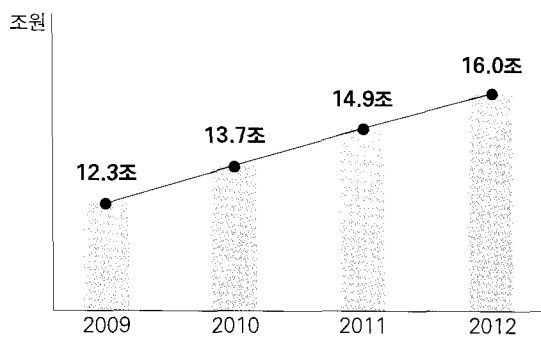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 플래닝 타워'로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와 협력하여 처음으로 마련한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안)'이 9월 29일 국과위 본회의에 보고되어 공식 발표되었다.

국과위 주도로 2012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이번에 확정된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안)'은 현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된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연구개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국과위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과정 시 민간 전문가 주도의 사업별 심층 검토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등을 사전에 가려내어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국가적 현안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다.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정부는 대외 경제 환경 및 국내 상황변수 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강력한 국가균형재정 의지에 따라 정부세출안 전체규모(예산+기금)를 2011년 대비 5.5% 이내로 조정하였음에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2011년 대비 7.3% 증가한 15조9천72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이중 기초·원천, 대규모 국책사업 등 국과위가 직접 배분·조정을 실시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0조7천212억 원으로 편성하고, 재정부가 편성한 국방·인문사회 등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조2천513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연구개발투자 확대 추이(2009~2012)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과부(5조400억 원), 지경부(4조6천843억 원), 방사청(2조3천179억 원) 등 3개 부처가 전체 R&D예산의 대부분(75.4%)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명·안전, 재난·재해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소방방재청(36.7%), 기상청(28.2%), 보건복지부(17.8%), 중소기업청(13.7%) 등 관련부처의 예산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보면,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투자 위험성이 커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나노, 생명, 우주항공·건설교통, 에너지·환경 분야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민간분야의 역량이 상당부분 축적된 기계·제조·공정 분야는 투자를 일부 축소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글 **최준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조정총괄과장
joonhn@nsc.go.kr
글쓴이는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재산관리팀장, 투자기획조정과장 등을 지냈다.

주요 부처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부처명	2011예산(A)	2012요구	2012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 교육과학기술부	4,707,969	5,894,798	5,040,043	332,074	7.1
■ 지식경제부	4,526,868	4,667,394	4,684,289	157,421	3.5
■ 방위사업청	2,016,361	2,444,124	2,317,942	301,581	15.0
▷ 중소기업청	628,800	662,462	714,989	86,189	13.7
▷ 보건복지부	337,117	429,492	397,003	59,886	17.8
▷ 기상청	60,749	68,253	77,866	17,117	28.2
▷ 소방방재청	25,793	27,305	35,259	9,466	36.7

주요 분야별 정부연구개발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안)	비고
■ 기초·나노·생명 등	39,026	40,959	·출기세포(601 → 1,004)
■ 에너지·환경 등	22,835	24,448	·원자력기술 개발(1,420 → 1,429)
■ 우주항공·건설교통 등	15,740	22,357	·한국형 발사체 개발(315 → 684)
■ 기계·제조·공정 등	18,321	16,863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4,129 → 4,161)
■ 정보·전자	22,972	23,663	·SW-시스템반도체 융합(70, 신규)
■ 인력·장비구축 등	30,008	31,435	·출연(연) 연구운영비(19,180 → 21,902)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위한 전략적 투자 확대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안)은 그동안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하여, 국정과제·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를 통해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절감된 재원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2012년도는 현 정부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관련 주요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해로서 국정과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였다.

기초·원천연구 확대, 녹색기술·신성장 동력 등 현정부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정과제에 집중 지원하여 당초 제시된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기초·원천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처음으로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핵심원천인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풀뿌리 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011년보다 500억 원 늘어난 8천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형발사체개발(684억 원),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1천74억 원) 등 기초·원천연구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다.

과학기술 관련 주요 국정과제 투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안)	달성 목표
■ 기초·원천연구 비중	35.2%	38.9%	42.9%	47.4%	50.6%	(2012) 50%
■ 녹색기술 투자	-	1.9조원	2.2조원	2.5조원	3.0조원	(2012) 2.8조원
■ 신성장동력 투자	-	1.5조원	1.9조원	2.2조원	2.8조원	(2012) 2.6조원

또한 올해 들어 과학기술계와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세부사업 추진일정, 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2천100억 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도 예산으로 4천100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초과학(연)의 25개 연구단 출범 시기 등을 고려해 소요금액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IT·융복합기술·녹색기술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디스플레이·해양플랜트·로봇 등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에 신규로 투자하는 한편, IT·BT·NT 등 첨단기술 융복합화 및 녹색기술 분야 지역 R&D에도 투자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바이오·SW 분야의 글로벌



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줄기세포 분야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성장되는 SW를 되살리는 SW뱅크 설립과 더불어 인력양성·기술확산·기반조성 등 SW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 ▷개인기초연구사업 : (2009) 5,000 → (2010) 6,500 → (2011) 7,500
→ (2012안) 8,000억원
- ▷미래유망 원천기술(신규) : 미래산업선도(90억원), 나노융합2020(42억원),
로봇산업클러스터(82억원)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 (2011) 889 → (2012안) 1,017억원
- ▷그린전기차·클린디젤 등 지역R&D : (2011) 190 → (2012안) 505억원
- ▷줄기세포 R&D : (2011) 601 → (2012안) 1,004억원 (67.1%증가)
- ▷소프트웨어 R&D : (2011) 1,996 → (2012안) 2,105억원 (5.5%증가)

정책현안·사회적 이슈 관련 연구개발 지원 강화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을 2011년 대비 13.7% 증가한 7천9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창업기업 및 서비스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확대(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천136억 원, 서비스연구개발사업 120억 원)하고, 수출 주력 글로벌 강소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262억 원) 지원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건강, 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지진·화산·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기술·지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2011년 : 626억 원 → 2012안 : 828억 원)하고, 구제역 등 재난형 동물질병·슈퍼박테리아 등 국가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도 확대(2011년 : 506억 원 → 2012안 : 653억 원)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고유 미션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묶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첫해인 2012년에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R&D 정부지원 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출연금의 비중을 2011년 현재 42.6%에서 52.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던 국가R&D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전략연구사업 지정, 연구시설사업비 출연 등을 통해 3천416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출연연구기관에 배정하였다. 국과위는 앞으로도 묶음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 60%, 2014년 70%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

이번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안)에서 역점을 둔 분야 중 하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연구장비 예산에 대한 심사와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여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5개 연구개발 예산 관련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고유 미션, 사업 추진 목표 및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복 분야에 대한 예산 조정을 실시하여 1천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부처 요구 기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장비 481건(4천340억 원 규모)에 대한 중복여부, 단가 적절성 등을 심의하여 약 3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였으며,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2011년 대비 181억 원을 감액하는 등(평균 13% 감소)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노력하였다.

국과위, 전문성 강화·투자효율화 방안 수립 계획

2012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의 상설 국과위가 재정부와 협력하여 마련한 최초의 정부연구개발 예산(안)이다. 국과위 출범 당시 또 하나의 '옥상옥' 기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재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주요 과학기술정책과 정부연구개발 예산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생명·안전, 재난·재해 등 사회적 이슈 및 공공분야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부연구개발 예산과 차별화되는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국과위가 3월 말 출범하여 짧은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다 보니 심층적 분석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자체적 평가와 아쉬움도 물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과위는 전문위원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개편하여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현안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연중 실시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과 편성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예산 배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T**

